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55
----------	------

발의연월일 : 2020. 11. 23 .

발 의 자 : 장경태 · 유정주 · 안민석
오영환 · 김영진 · 이소영
이용빈 · 신동근 · 홍성국
강득구 · 양정숙 · 문정복
정춘숙 · 김남국 · 이광재
의원(15인)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안 제24조 제6항 신설).

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대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함(안 제52조의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5(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

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보관·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3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에게 관리비등(제17조에 따른 관리비용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제17조의2제3항의 수선적립금과 그 밖에 해당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관리인 등이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원회, 관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6(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업무·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제26조의4까지”를 “제26조의6까지”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8제1항 중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를 “제52조의6제5항에”로 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6조의5제1항·제3항·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26조의5제8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르는 자

5.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 ⑤ (생략)</p> <p><u><신설></u></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5(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⑥ (생략)</p> <p>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u>구분소유자</u>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u>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u></p>	<p>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p> <p>② <u>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u></p>

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p><u><신 설></u></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u><신 설></u></p>	<p><u>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보관·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두어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유부분이 50개 이</p>
---	---

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에게 관리비 등(제17조의 관리비용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제17조의2제3항의 수선적립금과 그 밖에 해당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집합건물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집합건물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집합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관리인 등이 집합건물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원회, 관리인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은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신 설>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집합건물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해당 집합건물의 게
시판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
다.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26조의6(집합건물 관리비리 신
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
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
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이
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건물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p>	<p>3. <u>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u></p> <p>③ <u>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u></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업무·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p>
--	---

를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 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를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26
조의6까지-----
-----.

-----.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
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
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① --
-----제52조의
6제5항에-----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금)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2.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의5제1항·제3항·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

-----.

1.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신설>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5제8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를 자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10.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④ (생 략)	<u>특별한 사유 없이 분쟁조정에</u> <u>응하지 아니한 자</u> ④ (현행과 같음)
---------	--